

OECD, 정부의 위험관리기법 향상 필요성 지적

2009년 2월 25일 - 이번 OECD 보고서는 정부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향상시켜야하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용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스위스재보험 및 올리버 와이먼(Oliver Wyman)과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보고서 '국가 위기관리의 혁신(Innovation in country risk management)'에서는 오늘날의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는 개별 위기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며, 개별적인 사건들이 하나의 대재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위기가 어떻게 전 세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들고 있다.

"대규모 위험을 평가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많은 경우 홍수나 지진과 같은 특정 유형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OECD의 위험정책분석전문가(Risk Policy Analyst) 잭 라디슈(Jack Radisch)는 경고한다. "현재는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들이 각층에서 개별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관리구조는 위험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있는 오늘날의 상호 연결된 사회에서는 최적화된 형태라 하기 어렵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우리가 처한 위험에 대한 관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조율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상호조율된 위험 접근법으로의 진전

이번 OECD 보고서는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및 미국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연재해, 대형사고, 테러 또는 유행성 독감과 같은 위험의 잠재적 근원에 대한 '총괄적 위험관리'의 관점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정부기관의 위험에 대한 인식 향상을 목표로 범정부 통합위험관리(WOG-IRM, Whole-of-Government Integrated Risk Management) 체제를 시행했다.

"다양한 위험에 총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들 국가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부분에 더욱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지역 및 지방 정부 사이에서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에도 의지하고 있다"고 올리버 와이먼의 알렉스 비텐베르크(Alex Wittenberg)가 밝혔다.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80% 이상이 민간소유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분야에서 포괄적인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 다룬 국가들의 정부가 취한 성공적인 조치 중 하나는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그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대비 및 그로인한 손해 경감을 위한 보험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영국은 '국가위험등록부(National Risk Register)'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등재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 교육에 앞장서고 있고, 네덜란드 정부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행해 홍수위험이 큰 지역에서 대형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핵심적인 '국가방재(National Disaster Prevention)' 활동에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가 위기관리

국가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민간부문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유사한 ‘국가위험관리책임자(Country Risk Officer)’ 직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네트워크는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경감 활동을 조율하고 국가가 당면한 위험의 해결방법에 대해 정부조직 전체에 걸쳐 의사소통의 핵심이 된다”고 스위스재보험의 CRO 라지 싱(Raj Singh)은 말한다.

“이를 통해 사일로식 사고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정부 부처의 상충하는 우선순위들 간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국가위험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민간 부문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6개국의 접근방법은 이러한 모델을 완벽히 반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국가가 직면한 위험 포트폴리오에 대한 총체적이고 폭넓은 관점을 형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에는 위험 분석의 기반인 정보 공유 및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분리된 중앙정부 부처를 통합 또는 재편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관련 정부기관들을 조율하기 위해 국가원수 직속의 작지만 영향력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 일례로, 캐나다는 자연재해, 범죄 및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공공안전부(PSC, Public Safety Canada)를 설립했다.
- 일본은 국가의 재난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2001년 이래로 고위 정치인과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부처간 협력기구인 중앙재난관리위원회(Central Disaster Management Council)를 운영해 오고 있다.
- 미국은 2002년 22개의 개별 부처를 통합,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설립했다. 미 국토안보위원회(Homeland Security Council)는 대통령에게 국토 안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안보 관련 활동을 조율하며, 국토 안보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영국은 Y2K 공포, 2000년의 고유가 반발 시위, 2001년의 구제역 발생 등과 같은 사건 이후 수상실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내에 민간비상사태사무국(Civil Contingencies Secretariat)을 개설했다.

위험 이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재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한 자금 지원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현금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험의 재무적 처리에 있어서 ‘사후적’ 방법뿐 아니라 ‘사전적’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전적 조치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금융적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사회가 직면한 변화하는 위험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반면 사후 보상은 재난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공적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OECD 는 이러한 ‘사전적’ 접근방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험 및 최근에 개발되어 정부의 위험 이전에 도움을 주는 기타 다른 형태의 민간 위험이전의 역할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는 재해가 사전에 정의된 강도에 이르면 수익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대재해채권’이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민간 대재해 보험이 너무 비싸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만 정부차원의 대규모 보험 또는 위험이전 프로그램이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뿐 아니라 토지사용 계획 및 건축법규의 재정비 등 정부가 민간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기술하고 있다. 민간 보험의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에는 ‘대재해 풀(pool)’로 유보된 지급준비금에 대한 우호적인 세제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ecd.org/dataoecd/33/18/42226946.pdf?contentId=42226947>